

제 5 장 남북대화

제1절 군사분야 회담

제2절 경제분야 회담

제3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제5장

남북대화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남북의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7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은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북한은 6.15 및 10.4선언의 존중 및 이행을 요구하며 대남비난을 전개하면서, 3월 24일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3월 29일 남북 당국간 모든 대화와 접촉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남북간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촉구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회견(2008.4.17)을 통해 서울과 평양에 상설대화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53

회 현충일 추념사(2008.6.6), 제18대 국회 개원식 연설(2008.7.11),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2008.8.15),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개회사(2008.9.23) 등을 통해 직접 전면적인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대화재개 촉구를 비난, 거부하였다. 11월 12일에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문제시 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의 폐쇄와 남북 직통전화의 단절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6.15 및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왔고, 북한의 조치가 남북간 합의사항에 위반됨을 지적하면서 제반조치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2008년의 남북관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기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하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계기시마다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는 군사회담 2회, 경제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1회 등 총 6회가 개최되었다.

제1절 군사분야 회담

1.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황봉연(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2008.1.25, 판문점)

북한측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의 군사적 보장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화물열차 운행 이후의 화물량을 문제 삼으며 이에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는 열차운행이 초기단계여서 화물량이 적기는 하나, 열차운행상의 안전성 점점 필요성과 향후 화물열차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추후 전화통지문을 통해 입장을 교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1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화물열차는 매일 운행하되, 화물 적재화차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며, 세부사안은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2.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북한측은 9월 25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당국사이의 합의 이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을 9월 30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내부 일정을 감안하여 10월 2일에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측이 수용함에 따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10월 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 표	김정배(국방부 중령) 한기수(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북한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우리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가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전단살포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통한 우리측 인원의 통행과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우리측 인원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에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첫째,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하는 것은 상호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훼손하는 유감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둘째,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전면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현재 개성 관광객과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남북관리구역 출입·통행에 있어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단살포 문제와 관련하여,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후, 다만 우리 사회체제의 특성상 비무장지대 밖에서의 민간단체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전단살포 문제를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금강산 관광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난 중지 문제와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책임이 오히려 우리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 통행불편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해야 할 바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제반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10월 27일 경의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이 진행되어 전단살포와 군 통신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각자의 입장을 검토하기로 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제2절 경제분야 회담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1월 29일부터 30일 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위 원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대석·엄세룡·류지상 (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우리측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1차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2차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방식을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하는 것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열차화물 증대를 위해 북한측이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벌크화물 수송문제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정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 등을 우선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산~봉동간 열차화물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1.29~30, 개성)

쌍방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와 관련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화물 적재 화차만, 화물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차와 차장차만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2월 1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이후 열차운행이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 11일 화물열차 운행이 개시된 이래로 중단되기 전까지 총 222회가 운행되었다.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신의주 철도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수송을 위한 긴급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
- 개성~신의주 철도 구간에 대한 개보수를 민족 공동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2.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 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과 개보수 이후의 구체적인 공동이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김명국(건설교통부 도로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 보호성 부국장)
위 원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상호·김성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참사) 백문길(민족화해협의회 실장)

북한측은 고속도로의 개보수 범위와 착수시기를 우선 확정하자고 요구하면서, 공동이용 문제는 개보수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측은 구체적인 개보수 방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남북공동의 현지공동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계획, 개보수 방안과 공동이용 문제 등 여타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2.12~13, 개성)

공동보도문 요지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두 차례의 공동현지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
- 설계작성, 공사범위와 방법, 공동이용 문제, 필요한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문제 등 실무적 문제 협의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개최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이 2008년 2월 5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조선아태평화위원회참사)
대 표	정성태(통일부 서기관) 김훈아(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웅희(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참사)

우리측은 금강산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측이 제기해온 통행검사소 건립을 관리위원회의 설립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관리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통행검사소의 건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제2차 실무접촉(2008.2.5, 개성)

쌍방은 양측 입장을 집중 토의한 끝에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동해선 북한통행검사소의 건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 등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관리위원회」를 설치
- 남과 북은 금강산 통행검사소 건설 등 기반시설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히 해결

제3절 사회·문화분야 회담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이 2008년 2월 4일 개성「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 철(민화협 부장)
대 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팀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북한측은 남북 응원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여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으로 하자는 제1차 실무접촉 시의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고,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가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기로 하였다. 응원단 이용열차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용할 열차, 운행횟수 등 기본적인 사항은 응원단 실무접촉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동 문제가 경의선 개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철도관계자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여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절충하였다.

쌍방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후속회담이 개최되지 못하여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참여하는 것은 무산되었다.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제2차 남북실무접촉(2008.2.4, 개성)

합의서 요지

-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각 150명씩
- 응원단은 개·폐막식에 참가,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
-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형식과 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결정
-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 개·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 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
- 응원단 이용열차 및 편성 등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
- 제3차 실무접촉은 편리한 시기에 개성(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